한국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필요로 한다

- '내우외환'의 불안감 확산, SOC 재정 지출 등 유연한 경기 대책 강구해야 -

내우외환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 이라크 전쟁의 파장이 밀어닥쳐 북한 핵 문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침체 국면에 들어서기 시작해 갈수록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가계 대출 억제 등으로 그동안 경기를 떠받쳐 온 국내 소비가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투자 위축에 불안감까지 겹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권 교체기에 나타나는 불안감과 SK 그룹의 분식 회계 사건, 신용카드사의 부실화와 카드채의 환매 요구 등이 겹치면서 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위축되고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SK 그룹의 분식 회계 사건은 참여 정부의 재벌 개혁 방향과 관련해 관심을 끌었으나 정부가 경제 사정을 감안해 재벌 개혁의 속도를 조절키로 함으로써 재벌 개혁 바람은 일단 잠복한 상태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비롯한 경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외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정책 불안감까지 겹쳐 기업의 투자는 상당 기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가계 대출 억제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계 대출 위축은 곧바로 소비 둔화로 나타나 경기 둔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방만한 경영과 정책 미비 등으로 카드사의 부실이 깊어지고 투신권이 안고 있는 카드채 편입 펀드에 대한 환매 요구가 터지면서 금융 불안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매 중단, 대주주의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수수료 인상, 은행권의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급한 불을 끈 상태이기는 하지만 경기 침체와 맞물려 카드사의 부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카드채로 인한 금융 불안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수출은 그런대로 호조를 보이고는 있으나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교역 조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행 수지 적자 폭이 늘어나면서 올 들어 경상 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외환 위기 이후 지속돼 온 큰 폭의 경상 수지 흑자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라크전의 여파 등으로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어 수출 부진이 가시화될 경우 경상 수지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록 이라크전의 충격을 무사히 넘긴다 하더라도 중국 등의 추격으로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수출 증대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라크전의 향방이 결정적 변수

이러한 대내외적인 악재들을 반영해 연구 기관들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 외적인 불안 요인이 진정되고 적절한 정책 대응이 이뤄질 경우 올해 우리 경제는 5% 정도의 실질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지만 외국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2 3%선으로 추락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특히, 이라크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라크전이 한 달 정도의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은 없겠지만 그 이상의 중기전 또는 장기전이 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 수출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과거 40여일 동안 지속된 걸프전 때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당초 예상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경상 수지 적자 폭은 무려 4배가 늘어나는 경제난을 겪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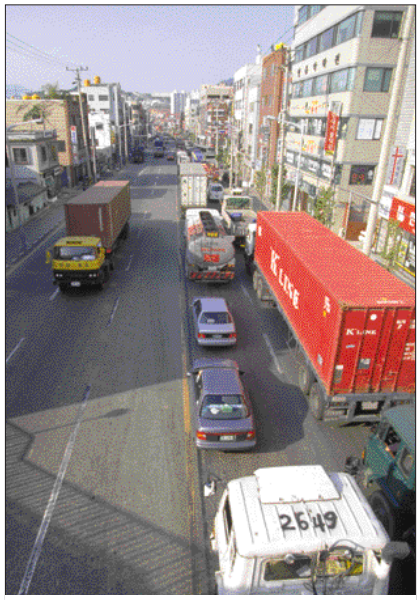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국제 금융

시장 및 외국인 투자 움직임에서도 비교적 뚜렷하게 감지된다. 연초 무디스사가 신용 등급 전망을 두 단계 낮춘 데 이어 SK 그룹 분식 회계 사건 이후 국제 금융 시장에서 한국물에 대한 금리가 크게 오르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식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입이 거의 중단된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도 매도 우위 상태를 보임으로써 주식 시장이 장기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주식 시장이 침체 상태에서 면치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우리나라 주가의 하락 폭이 컸던 것도 외국인 투자 부진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확한 정세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라크전 및 북핵 문제 등 경제 외적인 불안 요인들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는 자칫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형국으로 진단해도 무리는 아니다. 설령 이라크전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북핵 문제에 별다른 진전이 없고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외국인 투자 이탈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지 않고 적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이라크전의 충격을 최소하면서 전후 복구 사업 참여 극대화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라크전의 대응책에 있어서 정부는 장단기 시나리오별로 비상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쟁이 1개월 이내의 단기전으로 끝나는 경우 국제 유가가 안정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충격도 그만큼 제한적인 것이라는 가정 아래 특별한 경기 부양책은 펴지 않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개월 이상 끄는 장기전이 될 경우 재정 지출 확대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라크전이 조기에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나 언제 끝날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정책 대응에 실기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세 판단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라크전 및 북핵이라는 특수한 외부 상황 못지않게 과도한 소비 위축, 투자 부진,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경제의 펀더멘털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SOC 재정 지출 등 유연한 경기 대책 긴요

이라크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넘기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는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일이다. 당장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카드채 문제의 해결을 통해 금융 불안을 진정시키고 과도한 소비 위축, 투자 부진,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 나감으로써 경제의 펀더멘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경제난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적된다. 특히, 경제 상황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미래 준비 차원의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 공조 체제의 구축을 통해 경제 외적인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정책 및 개혁 내용과 일정 등을 조기 제시를 통해 정책 불안감 해소, 노사 관계의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 금융 시장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신인도 개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참여 정부는 주5일제 근무를 비롯한 노사 현안에 있어서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에서 노동 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벌 개혁과 맞물려 노사 불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노동 문화의 선진화를 통해 대립과 갈등의 후진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국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재조정하고 현금 확보에 나서는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